

민주 “한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안하면 탄핵”

오늘 국회 뒤편 3명 임명동의안 표결 탄핵 보류...임명 여부 지켜보기로 여 “입법 독주...권한쟁의 심판 청구” 권한대행 탄핵 가결 정족수 논란도

여야는 성탄절인 25일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재차 밝혔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입법 독주고 폭력”이라며 한 대행 탄핵은 국정 혼란을 자초할 뿐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뒤편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26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은 본회의 통과 후 한 대행이 이들 3명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전

날 밤의 직전 보류한 한 대행 탄핵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특검법에 대해 공포하고 국회가 선출하는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도 지체없이 임명장을 수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특히 “헌법재판관 3명을 선출하는 건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고유 권한”이라며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를 거부하려 하느냐”고 물었다.

이어 “한 대행은 내란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 공포, 국회의장이 요구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도 무시하고 있다며 내란 수사를 방해하는 의도가 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지금 한 대행이 해야 할 일은 국정 수습”이라며 “국민의 마지막 기대마저 저버리지 말라”고 강조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라디오 ‘김중

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우리가 한 권한대행에게 요구했던 세 가지”라며 “마지막 세 번째라 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한 권한대행이 하는지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고 판단했다”고 재확인했다.

민주당이 요구한 세 가지 사항은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 김건희 여사·내란 특검법 수용, 헌법재판관 임명 등이다.

박 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임명동의안 처리가 됐음에도 시간을 끌면 바로 (탄핵안) 발의에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27일 본회의가 (오후) 2시에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언제든 발의할 수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임명 절차에 즉각 나서지 않을 경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같은날 오후 또는 이튿날인 27일 오전에 발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 24일 탄핵안을 발의할 계획이었지만,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법안 발의를 일단 보류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없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이 의결되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즉각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날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헌법재판관 및 대법원 임명은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는 이를 행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종료된 이후에도 헌법적 절차와 권한에 대한 명확한 법리 해석이 필요하다”며 “헌법상 권력 분립과 삼권분립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

조했다.

국민의힘은 또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의 경우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 논란에는 “헌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을 수행하는 대통령과 같은 지위에 있다”며 “탄핵 절차는 대통령과 동일하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만약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주장대로 과반인 151석 이상을 기준으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정하면 역시 법적 조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권영세 비대위원장 내정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25일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성탄예배에 참석해 기도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이 25일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성탄예배에 참석해 기도하고 있다.

이재명 “예수께서 내란 몰아내는 국민과 함께하길”

여야 지도부, 성탄절 예배 참석 권성동 “민생·평화 기원 초심을”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성탄절을 맞아 “우리 정치는 광복 이후 첫 국회에서 민생과 평화를 기원했던 그 간절한 초심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이승만 전 대통령 시절 일화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정마다 예수님의 은총과 사랑의 온기가 가득하길 바란다”며 “성탄의 기쁨이 함께해야 할 때에 발걸음이 무겁다. 실의와 절망에 빠진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달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 앞

에 오늘 우리 국회는 고개 들 수가 없다”고 적었다.

이어 “국민께는 희망을, 사회에는 평화를, 나라에는 안정을 드리겠다고 다짐한다. 성탄절 희망의 빛이 대한민국 곳곳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두 손 모아 기원한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예

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손에 쥔 작은 빛으로 내란의 어둠을 몰아내고 있는 우리 국민들 곁에서 함께하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어둠을 물리칠 빛의 성탄을 꿈꾸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적었다. 이어 “(예수께서) 민생 위기 한파를 맨몸으로 견디고 계실 국민의 몸과 마음을 녹일 따스한 촛불이 돼 주셨으면 한다”고 바랐다.

이 대표는 “쉽사리 잠들지 못하는 고요하고 거룩한 밤이 이어질수록 새로운 나

라를 향한 소망의 빛은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며 “매일의 삶 속에서 국민 여러분의 성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치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등과 함께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성탄 예배를 봤다.

한민수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광장으로 모인 국민의 염원이 모여 국회의 윤석열 탄핵안 가결로 이어졌다”며 “이제 조속히 내란을 종식하고 국가 정상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김선욱 기자

조한창 후보자 “헌법재판관 6인 심리 비정상”

인사청문회서 “9인체제 합당”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6명이 심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재판관 6명이 심리하는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법) 규정에 따르면 7명 이상이 심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헌법 규정에 9명의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어 규정상은 당연히 임명하는 것이 맞다”며 “그래서 9명의 재판관이 구성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정당성을 위해서도 합당한 방법이라고 생

각한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것과 관련한 질문을 이어갔다.

조 후보자는 ‘우리 헌법은 국회의 의사 결정 방법으로 어떤 것을 채택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국회의원들의 의사표현은 표결 방식으로 한다”며 “표결은 다수결의 원칙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소수자의 의견도 검토해서 서로 간에 국회에서 합의로 이뤄지면 좋겠지만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이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며 “만장일치가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게 안 된다면 결국 각자 의사를 표출하는 방식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당시 전시·사변 상황은 아니었으나 계엄 선포 요건이 성립된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한 행위는 위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 뒤편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마은혁(61·29기)·정계선(55·27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이어 여당 뒤편으로 추천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불참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조국혁신당 “공수처, 윤 체포영장 즉각 청구”

조국혁신당은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찾아 “윤석열이 공수처 출석 시한을 넘겼다”며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등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는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영장을 즉각 청구하라”고 밝혔다.

혁신당은 “윤석열이 증거를 인멸하고, 내란 공범을 회유하며 입을 맞출 시간을 더 주려는 안 된다”며 “체포할 때는 한남동 관저 압수수색도 시행해야 한다. 관저는 내란 증거가 차고 넘칠 반국가세력의 소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의 개인 핸드폰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며 “내란에 연루되었을 것으로 국민 모두 의심

하는, 대통령을 좌지우지한 배우자 김건희 씨 핸드폰도 압수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덕수 총리 역시 수사해야 한다”며 “그는 어제부로 내란 공범, 수괴 중 한 명이 됐다”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시간을 끌어도 달라질 것은 없다. 윤석열에게 ‘전화위복’은 없다”며 “오직 ‘국가전복’ 죄목만 기다릴 뿐”이라고 했다.

혁신당은 이에 앞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도 찾아 “수사기관에 출두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공수처 출석요구서를 거부하면 체포 대상이 된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출두하라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김선욱 기자